권두언

생산적 복지의 정책목표

鄭 敬 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새 천년을 맞아 전국민의 기초생활이 보장되고, 인간개발과 사회교육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능력과 기능이 향상되며, 복지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성장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생산적 복지공동체』(Generative Welfare)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대 기본 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첫째, 국민 모두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초 사회안전망』이 확립되어야 한다. 소득·의료·주거·교육 등의 기초생활을 국민의 권리로 보장함으로써 빈곤탈피와 소득의 공평한 재분배를 통해 사회통합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1차안전망(사회보험) - 2차안전망(사회부조) - 3차안전망(긴급구호)으로 이어지는 사회안전망을 체계화하고, 현행 공급자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공급체계에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체계(one-stop-service)로 전환하여 수요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서비스공급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아울러 『가정과 같은 사회』의 실현을 위해 보호대상자의 특성과 가족의 보호능력을 고려한 사회적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가족기능의 약화를 지역사회 공동체의 연대로 보강할 수 있는 상호보호의 사회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둘째, 복지투자가 사회공동체의 성장으로 순환하는 『고용창출과 투자적』 복지로 기본 틀을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근로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자활과 자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근로연계 복지체계가 확립되어야

성장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생산적 복지공동체』의 실현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이 시점에서
국가적 과제이자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한다. 특히, 지역사회중심의 자활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다양한 자활프로그램 개발과 자활프로그램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산업을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성장주도산업으로 발전시켜 신지식의 축적과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의료기기·의약품·식품산업의 수입대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적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복지를 산업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복지관련 서비스·유통·정보·제조업이 고용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화·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노인을 은퇴 후 여생을 보내는 복지수혜자로서 보다는 『고령의 경제인』으로 발상을 전환하여 노인창업과 취업을 지원하고, 아동보육사업에 대한 공개념을 도입하여 여성의 자녀양육 부담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분담함으로써 노인과 여성의 전문성과 직능이 생산기여적 자원으로 활용되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셋째, 보건의료·교육·주택·문화 등에 대한 『사회투자』가 증대되어야 한다. 근로연계 복지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능훈련·사회교육·평생교육 및 구직활동 지원을 통해 근로가 가능한 취약계층의 인적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인간개발이 사회적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나아가 예방적 건강투자를 통해 질병으로 인한 노동손실과 이에 따른 국민소득의 상실 등 국가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빈곤·실업·질병·장애·노령 등 생애주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평생건강관리체계와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관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넷째, 보건복지 『제도간 연계와 통합』을 통한 효율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사회보험 관리·운영조직의 연계·통합을 통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내부시장원리에 입각하여 경쟁을 통한 관리운영의 효율화와 자율경영에 부합하는 책임·보상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 제도·정책·조직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정보화함으로써 서비스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요자의 보건복지정보에 대한 접근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특히, 노령·질병·사망 등 평생동안의 복지서비스 수급관리를 위한 『복지카드제』 도입 등의 제도적 장치와 정보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복지자원의 적정 관리 및 활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복지에 대한 국민 부담과 급여가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관점에서 적성선이 유지되고, 부담과 급여의 공평한 재분배 시스템이 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보험의 재정균형화와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은 공동의 복지주체로서, 보건복지에 대한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의 참여기반이 확충되어야 하며, 제3섹터와의 협조와 경쟁을 통한 적정한 역할 배분과 『파트너쉽』이 구축되어야 한다.

생산적 복지의 목표와 정책 프로그램

정 책	목 표	프로그램
Ⅰ. 기초사회안전망		
○ 기초생활보장	• 빈곤 해결 • 소득재분배	• 기초 소득·의료·주거·교육 • 급여제공의 보편성·동시성·규모성
○ 근로연계복지	• 근로동기 유발 • 노동유연성	• 취업정보, 교육훈련, 민간의 임금보조 취업, 환경관리 업무 및 자원봉사
○ 사회안전망 체계화	• 사회통합	• 1차안전망(사회보험)－2차안전망(사회부조)－3차안전망(긴급구호)
Ⅱ. 사회투자의 증대(보건의료·교육·주택·문화 등)		
○ 인간개발/기능교육	• 기능·능력 향상	• 직능교육, 사회교육/평생교육 • 보건·복지 전문인력의 재교육
○ 예방적 건강 투자	• 건강증진·질병예방	• 건강교육센터, 건강박람회, 건강Zone 설치
○ 평생주기 관리	• 평생건강·평생복지	•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관리체계 • 평생건강관리체계 확립
Ⅲ. 성장친화적 복지		
○ 성장친화적 복지산업	• 고용창출 • 생산성 증대	• 실버산업 육성 • 보건산업의 고부가가치 전략산업화
○ 노인의 생산적 복지	• 노인소득 증대 • 노인고용 지원	• 노인창업·취업 지원 • 유급자원봉사 활동 지원
○ 경쟁 및 책임경영방식	• 효율성 제고	• 보건·복지서비스 평가제 • 사회보험의 일선 조직단위별 책임경영
Ⅳ. 수요자중심 복지체계		
○ 가정과 같은 사회	• 가족기능 회복	• 재가복지서비스 • 보호제공자 수당 도입
○ 제도간 연계·효율화	• 수요자 편의 • 공급자 행정효율화	• 사회보험 관리운영 효율적 연계 •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주민복지센터』설치(one-stop-service)
○ 정보체계의 효율화	• 정보접근성	• 개인별 보건·복지카드제 도입 • 보건·복지정보의 인프라 구축
Ⅴ. 자원관리 적정화		
○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 재정균형화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 의료보험 재정안정화
○ 자원배분의 적정화	• 계층간 부담 형평성 • 자원활용 효율화	• 사회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 연금기금운용의 효율화
○ 공공·민간 파트너쉽	• 정부·민간 협력증진	• 민간의 인적·물적자원의 참여기반 확충 • 제3섹터(NGO's)와의 협력체계